

<취재요청/보도자료>

-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담당
 - ◎ 발 신 : 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차범대위,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 ◎ 문 의 :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 윤지선 손잡고()
 - ◎ 발송일자 : 2019년 2월 1일
 - ◎ 제 목 : [보도자료] 법무부의 쌍용차노동자 일부 가압류 해제 조치 발표에 대한 입장
-

‘능력대응’과 ‘선별적 가압류 해제’에 유감을 표한다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철회 즉각 이행하라

오늘 법무부는 39명의 쌍용자동차 국가 가압류 대상자 가운데 ‘26명의 복직한 노동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해제할 것을 발표했다.

우리는 법무부와 경찰청의 가압류 해제 조치에도 쌍용차 노동자들이 마냥 안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법무부는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음에도, 복직자 26명을 ‘선별적 해제’했다. 이같은 결정은 복직대기자들에게는 가압류마저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39명의 노동자들이 장기해고도 모자라 퇴직금과 부동산을 가압류당한 채 고통을 견뎌야 했다. 이 긴 시간의 상처는 ‘선별’할 수 있는 것일 수 없다.

이에 더해 이번 조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능력대응’이 됐다. 이미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복직노동자의 첫 급여가압류에 이어, 오늘 설 상여금마저 가압류됐다. 이미 상처가 헤집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안도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가압류의 원인이 됐던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국가폭력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중 진술에 참여한 김주중 조합원이 헤집어진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른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지 두 달 뒤인 8월, 쌍용차노동자들은 경찰청 인권침해조사결과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당시 조사위원회는 경찰청에 ‘사과’와 함께 ‘국가 손해배상가압류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30일, 경찰청 면담 과정에서 우리는 ‘손해배상 철회’를 비롯해 조사위원 권고에 대한 이행방안이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절망해야 했다. 경찰청과 법무부 사이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조차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압류 해제’마저 급여일을 코앞에 둔 1월 중순에서야 논의되는 등 절차적으로도 늦은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국가손해배상가압류는 ‘국가폭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국가손해배상이 철회되지 않는 것은 국가폭력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재판을 상기할 때마다, 노동자들은 2009년의 전쟁 같던 쌍용차 옥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그대로 복기해야 한다. 2015년 역학조사 결과, 당시 국가폭력이 ‘베트남 참전 용사의 트라우마’와 맞먹을 정도의 고통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손해배상 소송은 그 자체의 억울함을 넘어, 고통스러운 상황과 기억을 반복시킨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다. 앞서 우리는 서른 명의 희생자를 마주해야 했다.

5개월이 지나도록 ‘손해배상 철회’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도 조치도 되지 않는 상황,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인 경찰청이 아무런 설명없이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는 상황은 하루, 한시간, 일분, 일초, 매 순간이 그 자체로 ‘폭력’이다.

경찰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폭력’ 사건에서 경찰청은 ‘국가폭력 책임자’다.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기관이기에 앞서 책임자로서 손해배상 철회 등 조사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누구보다 적극 나서야 하는 주체가 경찰청이다. 이제라도 서둘러 ‘못다한 사과’와 ‘권고이행’을 실시하길 바란다.

법무부에도 재차 요구한다. 매순간 절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을 만나 ‘손해배상 철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법무부가 국가소송 사건의 대리인이라고 하지만, ‘국가폭력’을 대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쌍용차사태 해결의 작은 출구라도 마련하는 길은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극도의 불안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것 역시 주무부처의 ‘책임’과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요구한다. 청와대-국무조정실-법무부-서울고등법원-경찰청이 참여한 TF를 즉각 구성하라. 국가손해배상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책임기관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해야 가능하다. 국가폭력 사태해결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 청와대다. 작년 9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다.

우리는 이번 복직자에 대한 급여가압류 사건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상처를 헤집게 된 점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길은 결국 책임자가 역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더는 책임기관의 ‘늑장대응’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길 바란다. 전체 가압류 해제를 넘어 손해배상 철회에 대한 이행이 시급하다.

2019년 2월 1일

국가손해배상모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범대위

[별첨]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설 상여금 가압류 확인

1. 2.1 설 상여금 가압류 확인된 조합원 급여명세서

visionNet 급여명세서		visionNet 급여명세서	
지급 내역		지급 내역	
기본급		기본급	
직무역할급		직무역할급	
근속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복지수당	
위험생산수당		위험생산수당	
가족수당(본인)		가족수당(본인)	
가족수당(가족)		가족수당(가족)	
상여수당		상여수당	
보선수당		보선수당	
직무(가)-108		직무(가)-108	
총지급액		총지급액	
공제 내역		공제 내역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법정채무금 공제	210,000	법정채무금 공제	230,000
소득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총공제액		총공제액	
실지급액	226,604	실지급액	241,800

▲최** 조합원 설상여금

▲김정옥 사무국장 설상여금

2. 1.25 급여가압류 명세서

visionNet 급여명세서		visionNet 급여명세서		visionNet 급여명세서	
위험생산수당		근무능력향상수당A		근속수당	
가족수당(본인)		휴일특근보조수당		복지수당	
가족수당(가족)		평일진업보조수당		위험생산수당	
보선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본인)	
직무(가)-108		복지수당		가족수당(가족)	
직무(나)-120		위험생산수당		보선수당	
총지급액		가족수당(본인)		직무(가)-108	
공제 내역		가족수당(가족)		직무(나)-100	
국민연금료		보선수당		총지급액	
건강보험료		직무(가)-108		공제 내역	
건강보험료(요양)		직무(나)-100		국민연금료	
노동조합비		총지급액		건강보험료	
노동조합비II		공제 내역		건강보험료(요양)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		노동조합비I	
법정채무금 공제	190,771	건강보험료		노동조합비II	
소득세		건강보험료(요양)		고용보험료	
지방소득세		노동조합비		법정채무금 공제	910,000
총공제액		노동조합비II		소득세	
실지급액	2,125,539	고용보험료		지방소득세	
		법정채무금 공제	1,230,000	총공제액	
		소득세		실지급액	851,543
		지방소득세			
		총공제액			
		실지급액	1,174,727		

visionNet 급여명세서	visionNet 급여명세서	visionNet 급여명세서
위험생상수당 가족수당(본인) 가족수당(가족) 보전수당 직무(가)-108 직무(나)-120 총지급액	근무노동휴상수당A 휴일특근보조수당 발달장애보조수당 근속수당 복직수당 위험생상수당 가족수당(본인) 가족수당(가족) 보전수당 직무(가)-108 직무(나)-100 총지급액	근속수당 복직수당 위험생상수당 가족수당(본인) 가족수당(가족) 보전수당 직무(가)-108 직무(나)-100 총지급액
공제내역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요양) 노동조합비 노동조합비 고용보험료 법정채무금 공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총공제액 실지급액	공제내역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요양) 노동조합비 노동조합비 고용보험료 법정채무금 공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총공제액 실지급액	공제내역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요양) 노동조합비 노동조합비 고용보험료 법정채무금 공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총공제액 실지급액
총지급액 2,125,539	총지급액 1,174,727	총지급액 851,543
▲장** 조합원	▲최** 조합원	▲김정옥 사무국장

3. 가압류 대상자 현황

경찰 가압류(2심 재판 결과)

- 2016년 2심 이후 가압류 중 일부가 풀렸고, 2019년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압류는 총 3억 9천만원이며, 채무자는 총 39명, 가압류 금액은 총 4억에 달한다.

채 권 자	채 무 자	가압류 금액	비 고
경 찰	조합원 39명	3억 9천	임금 및 퇴직금1천만원
경 찰	조합원 1명	1천	부동산압류 1천만원

- 현재 채무자 39명 중 27명이 복직한 상태이고 경찰청과 법무부는 이 중 26명에 대해 해제조치를 밝혔다. 13명 제외됐다.